

침묵하는 사이, 뉴스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 9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2025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MBC는 3년 연속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 1위>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가장 불신하는 언론 1위>로도 꼽혔다. 정치 지형의 극심한 양극화와 뉴스 소비의 '팬덤화'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우리 뉴스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간 보여주었던 서릿발 같은 기개, 언론 본연의 사회적 효용을 최근 들어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표였다.

민실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뉴스에서 노출된 다양한 '이상 신호'에 대해 지적해왔다. 마찬가지로 최근 국장 간담회에서도 많은 뉴스룸 구성원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뉴스 수뇌부는 반성과 성찰을 약속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는 게 민실위원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다음은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우리 뉴스룸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왜 '민주당 보도'라 비판하나 물으신다면

지난 11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정부 들어 첫 현직 장관의 낙마 사례이자, 통일교로비 의혹이 전 정권 인사들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는 '게이트'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점이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톱뉴스로 비중있게 보도한 이 기사를, 우리 뉴스데스크는 11번째 리포트, 단신을 포함하면 큐시트 13번째 꼭지에 배치했다.

[12/11 전재수 사퇴 기사 큐시트 순서 비교]

MBC (13)	KBS (1)
	
	

언론사별 관점에 따라 톱블럭이 천차만별로 나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정치권의 대형 이슈에 대한 가치 부여가 이 정도로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른바 진보적 매체들로만 비교해 봐도 JTBC는 메인뉴스 기준 두 번째 꼭지로, 한겨레, 경향신문 모두 다음날 조간 1면 톱으로 보도했다. 이런 기사를 국장급 공무원인 국방홍보원장 해임 소식보다도 큐시트 뒷전에 배치한 뉴스는 MBC 뿐이었다.

아예 외면해버린 이슈도 있었다. 지난달 종편 단독보도로 제기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경우 K, S는 해당 보도 당일인 27일, JTBC는 다음날인 28일 의혹과 당사자 반론을 함께 담아 보도했지만 우리는 이를 간 발제조차 나오지 않다가 29일에야 뒤늦게 보도했다. 데스킹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11/29 장경태 성추행 논란 기사 데스킹본-실제 방송본 비교]

데스킹 완료본	방송본
<리포트>	<리포트>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싱크> 장경태 의원(지난 27일)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응해야지.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했다며 한 여성이 경찰에 장 의원을 고소한 것이 알려진 뒤,	한 방송 뉴스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장 의원은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역시 "명백한 무고"라는 겁니다.	<싱크> 장경태 의원 (지난 27일)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응해야지.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시 음식점에 찾아온 여성의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찰영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인 남성이 "자신을 폭행하고 폭언해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정당 소속 보좌관들끼리 회식을 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장 의원이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소인과 장 의원이 나란히 앉아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이 추행을 했다는 게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주장입니다.

기존 의혹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팩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반론으로 시작해 반론으로 이어가는 기사가 방송될 뻔 했다는 것이 아찔할 뿐이다. 정치팀 현영준 데스크는 "당시 선정성을 경계해 드라이하게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안 자체에 대한 서술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 주말 편집부의 지적을 받고 기사를 수정해 방송했다"며, 민실위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유독 정부 여당 인사의 비위나 실책과 관련된 일에는 ‘기본’도 못 지키는 함량 미달의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아직도 갈 길이 먼 내란세력 청산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노력을 재조명하기도 바쁜 날,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졌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이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는 현장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모든 언론사가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12/3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기사 제목 비교]

MBC	대통령실, '훈식이형' '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에 "엄중 경고" 공개 질타
KBS	민주당 지도부 인사청탁 문자 포착… 야 "김현지 상왕 입증"
SBS	"훈식이형·현지누나" 딱 걸린 화면… 긴밀한 문자 오갔다
JTBC	'인사청탁 문자'에 김현지 언급되자… 국힘 "진짜 실세 확인"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서실장과 부속실장 이름을 ‘형, 누나’라고 언급하며 민간 기관 수장 자리에 자기 대학 동문을 꽂아넣자고 여당 중진과 논의한 사건이다. 남일 다루듯 심판 노릇하며 “엄중 경고”할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사를 쓴 취재기자가 포커스를 잘못 잡았던 것일까? 아니다. 기사 수정 이력을 살펴본 결과 송고본의 원래 제목은 <인사청탁으로 불거진 ‘김현지 비선실세’ 의혹>이었지만, 데스킹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날 석연찮은 기사 수정 이력이 하나 더 확인되었다. 내란 1년을 성찰하는 논설위원의 논평 보도였는데, 한 구절이 유독 인상적이었다.

윤석열은 폭음에 취했고 부인 김건희는 권력에 취했습니다.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정부는 내부의 의견을 넓히고 언론의 쓴소리를 키워 듣고, 누가 말하는가가 아니라 비판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도, 김혜경도, 그가 누구이건 김현지라는 이름도 누구도, 금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사 제목이 출고를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변경된 지 세 시간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사 밑줄 친 부분은 돌연 삭제되었다. 적어도 MBC 뉴스에, 어떤 금기는 여전히 실존하는지도 모르겠다.

진정 시청자를 위한 뉴스는 무엇인가

지난 달 박범수 뉴스룸국장 정책간담회에서 민실위는 최근 우리 뉴스의 편향성 심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얼마전 저연차 기자들이 자유게시판에 잇따라 올린 글에도 마찬가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성찰하고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민주, 진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우리 보도의 지향점이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 혹은 사회세력들과 교집합을 형성할 수는 있다.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같은

것이지 처음부터 ‘친 무슨 당’ 보도를 하기 위해 가치를 뛰어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발언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금품수수, 성추행, 인사청탁은 우리 보도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듭 지적하는 것이다.

혹자는 현실론을 이야기한다. 지난해부터 시청률 1위, 신뢰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뉴스의 핵심 시청층이 원하는 뉴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쓴소리 아이템을 내면 순간 시청률 그래프가 눈에 띄게 꺾이는 게 사실’이라는 편집부 구성원의 하소연 가까운 이야기도 들린다. 개별 담당 기사가 아닌 뉴스 전체의 성과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시청자의 취향을 고려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편집회의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타사와 다른 뉴스, 우리만의 관점이 있는 뉴스를 일선에 주문하고 있다. 그 방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시청자는 MBC만의 시각을 원하는 동시에, 공영방송 이름에 걸 맞는 엄밀성과 완결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다룬 우리 보도에 대한 비판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제기했기에 이 자리에서 반복해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보도 실패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뉴스데스크는 내란혐의로 기소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법원이 일반사건으로 바꿨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기사 뿐 아니라 앵커멘트에서도 “법원이 보였던 의심스러운 행보가 드러났다”며 질타에 가세했다. 최근 사법부의 잇따른 ‘이례적 행보’가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서 의원의 이번 주장을 법원의 배당절차와 용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제기된 ‘헛발질’에 가까웠다. 전담사건-일반사건의 구분은 중요사건 여부와는 별도의 다른 기준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일선 기자들은 기사 발제 당시부터 해당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우려를 편집부에 전달했다. 보도 이후에도 법조팀이 법원의 반론을 전달했지만 수정 반영 등 후속조치는 없었다. 지금도 이 뉴스는 동영상 클립을 통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정교하지 못한 여당 인사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리 보도의 신뢰도 또한 함께 손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뉴스, 우리 앵커를 믿고 시청해 준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다.

대통령 동정이나 스케치성 보도에서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용비어천가’식 서술도 우리 시청자의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다.

[대통령 등 동정보도 관성적 서술 사례]

보도 일시 및 제목	기사 본문 (발췌)
11/01 한복 입고 불국사에서 '케데현' 복주머니 선물한 김혜경 여사	옥색 저고리에 쌀알처럼 밝은 노란색 치마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김 여사가 길목에서 한 명씩 맞이했는데,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한눈에 들어오는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p>11/16 이 대통령 재계 총수 만나 "기업 지원 위해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p>	<p>[이재용/삼성전자 회장]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p> <p>[서정진/셀트리온 회장] 우리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p>
<p>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격.. 1년 만에 '회복 신호탄'</p>	<p>APEC 정상회의는 국제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로 가져왔습니다.</p> <p>각자도생만 남은 듯한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류 공영의 가치를 되새겼고,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부산에서 휴전을 약속했습니다.</p>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답습하지 않고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해주기를 바랄 것이며,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줄 때 기꺼이 박수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잘 한 부분이 있다면 잘 한 부분을 이야기하되, 과거 '육영수 여사'를 찬양하던 대한뉴스처럼 대통령 배우자의 아름다운 한복 옷태를 평가하거나,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줄지어 대통령의 치적을 칭송하는 싱크를 40초나 들여 보도하기를 원할 거라고 넘겨짚지 말자.

뉴스 소비 패턴이 변하고 뉴미디어 비중이 커지면서, 영상클립 섬네일과 제목이 때론 본문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주목도 제고와 선정성 사이의 적절한 '선'에 대한 뉴스 조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적 분노' 비판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지연된 정의', '선택적 분노'. 최근 우리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민실위는 내란 세력 심판을 둘러싼 사법부 일각의 미심쩍은 움직임에 대해 날카로운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뉴스의 원칙에 동의한다. 현행 검찰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조직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만 뜨겁게 끓어오르는 검찰의 표리부동에 대한 비판 필요성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비판을 떳떳하게 하려면 우리의 정의는 지연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분노는 선택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1월 8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 조직 내부 뿐 아니라 해당 뉴스를 보도한 우리 조직 내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11/8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포기 논란 기사 비교]

MBC	SBS
<p>...</p> <p>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대검 측이 배임에 대해 유죄 선고가 됐고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법무부 관계자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 데 1심 선고는 검찰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p> <p>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높을 수 없지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p>	<p>...</p> <p>앞서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선고사를 뒤인 지난 3일 항소를 결정했고 어제 낮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과 4차장으로부터 결재도 받았습니다.</p> <p>그런데 몇 시간 뒤 대검찰청이 불허 결정을 내렸고, 중앙지검의 결재도 번복된 결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p> <p>...</p> <p>대장동 업자들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지만, 검찰이 <u>스스로</u>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p> <p>또 검찰은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추징금 7천800억원을 청구했는데, 1심은 473억 원만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나머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p>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이례적 정황은 '협의에 의한 결정'으로 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누락했다. 당일 법조팀 근무자는 물론, 비변인 기자들까지 기사 방향을 우려해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전문가 의견들을 보고했지만, 별다른 피드백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법조팀장이 직접 대검 핵심 관계자와 단독 통화했고, 취재한 바에 따라 기사 방향을 판단한 것이라고 해도 해당 사안의 본질과 불러온 파장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축소 보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실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우리 뉴스는 항소 포기 사안 자체보다는 검찰 조직 내부의 항명 움직임에 주목하며,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이는 적어도 본론을 충분히 전달하고 나서 부연할 수 있는 각론의 영역이 아닌가. 정작 사안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평'에만 치중하는 우리 보도는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돌이켜봐야 할 때다.

이후 법조팀 기자들은 후속보도를 통해 누락된 팩트들을 뒤늦게라도 보도하기 위해 애썼지만, 매일 새로운 스트레이트가 쏟아지는 이슈 경쟁에서 잘못 짠 첫 단추를 수습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취재 경험이 있는 구성원 모두가 아는 일이다. 심지어 앵커멘트와 편집부 자막이 애써 취재한 기사를 '뒤집는 듯한' 일도 있었다.

[11/10 항소포기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 분석 보도]

기사 본문	앵커멘트
<p>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p> <p>... 다만 전체 소가가 387억 원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 확정돼야 민사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p> <p>이번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p> <p>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 이유로 꼽았습니다.</p> <p>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선 7천8백억 원 넘는 금액이 추징금으로 구형됐지만, 1심 선고는 4백억대로, 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p> <p>그래서 일각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돈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미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p>

해당 기사 좌상단 자막

범죄수익 환수 '가능'

기사 논조는 '민사소송 환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협의를 받고 있는 범죄수익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인데다 그 과정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된다'인 반면, 앵커멘트에서는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좌상단 자막에는 아예 '환수 가능'이라고 못 박았다. 조현용 앵커는 민실위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719 페이지 판결문을 정독하고 사안에 대한 기자로서의 판단을 담은 것. 다만 취재기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

앵커멘트가 뉴스진행자의 고유 영역임을 존중한다. 우리 뉴스가 '속 시원한' 앵커멘트 덕분에 호평받은 적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가 본래 기사와 얼마나 거리를 두어도 좋을지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복대'와 '좌상단' 등 자막도 마찬가지다. 물론 보도의 1차적 책임은 취재기자에게 있으며, 앵커멘트나 자막이 엉뚱한 내용으로 나가지 않도록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할 우선적 책임도 취재기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같은 책임이 착오나 실수 같은 선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앵커와 편집부의 왜곡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식의 의무로 변한다면 우리 조직 전체의 큰 불행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성찰하고 소통해야

12·3 내란 이전부터 우리 뉴스는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앞장서서 경고한 '퍼스트 펭귄'의 노릇을 자임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위협과 탄압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훈장으로 여기고 구성원들이 뜰뜰 뭉쳐 끝내 이겨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밤에는 국회에 장갑차와 군용헬기가 떴다는 소식에도, MBC에 군

부대가 출동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묵묵히 출입처로, 회사로 돌아가 자리를 지켰다. 당분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란 마음으로 가족에게 짧게 인사하고, 양말과 속옷을 챙겨 집을 나섰던 그 순간의 기억은 국장부터 막내 현장기자까지, 우리 구성원 모두가 여전히 생생하게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 재판정에 세우기까지 매 순간마다 두렵고 고됐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힘들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쌓아올린 자부심이, 뜰뜰 뭉쳤던 보도 조직의 하나된 힘이 불과 1년 만에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

수뇌부의 오판을, 중간 책임자들의 비겁을 탓하기보다 현장에서 이름을 걸고 보도하는 우리 모두의 잘못을 가장 먼저 반성하고자 한다. 기사 한 줄을 지키기 위해 인사위 회부를 각오하고, 사직서를 품에 넣은 채 취재 현장에 나서야 했던 일상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비정상의 시절이 끝났다면 마음놓고 있을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뚜렷이 섰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싸웠어야 했다. 당장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두려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는 않았어야 했다.

지난 정책간담회 중 박범수 국장은 "(기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취재해 온 것과 다르게 팩트를 왜곡시키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보도 과정은 상호 설득의 과정이어야지 강압과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후배들이 발제한 부분은 오보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나간다"고 덧붙였다. 이제 와서 국장의 상황 인식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열심히 취재하고, 발제하고, 설득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일선 기자들이 져야 할 짐이 무겁다.

가장 급선무는 조직 내 소통의 회복이다. 편집회의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타사 뉴스를 잘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1등'이라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 우리만의 뉴스를 하겠다는 소신이라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 보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도 그만큼 잃어버렸다. "뉴스 좋았다"는 의례적인 칭찬도 이제는 공허하다. 많은 일선 부서에선 동료의 보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문화가 사라졌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긴 정적 뒤에 남은 것은 피로감과 막연한 불신 뿐이다.

한 민실위원은 "정말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별 리포트가 문제 있다, 없다를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상함을 감지해도 곧바로 '나만 그렇게 느끼나? 내가 연차가 낮아서 판단이 잘 안 되는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겸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현직 팀장급 보직자도 답답하다며 "데스킹이 마음에 안 들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도 동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털어놓았다.

소통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은 침묵과 인내가 능사가 아님을 이제는 절감한다. 늦었지만 본 보고서가 뉴스룸 내 수직적, 수평적 소통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노릇을 할 수 있기 바란다.